

지방의회, 불황 고통분담 내세워 의정부 동결 늘지만

“재정 감안하면 삭감·반납해야” 목소리

28곳서 동결·일부 의회는 원구성도 못한채 돈만 쟁거

내년도 의정부 동결을 선언하는 지방 의회가 늘고 있다.

의정부 동결 결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 등을 감안하면 의정부 동결에 그치지 말고 오히려 삭감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회는 이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

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의정부 동결을 선언했거나 최종 절차만 남겨둔 지방의회는 28곳으로 늘었다. 앞서 충북 옥천군과 음성군의의회가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총남지역 12개 기초의회 중 9곳이 의정부 동결을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동두천시의회와 연천군의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고, 전남 구례군은 지난 20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의정부 동결을 결의했다.

대선 5개 기초의회 의정들로 구성된 '대전시 자치구의회 의정협의회'는 25일 첫 모임을 열고 구정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는

지방의회	결정현황
서울 중구	동결 결정 합의
부산 시	동결 결정 합의
부산진구	동결
울산 중구	동결 결정 예정
경기 수원·남·북구, 울주군	동결
경기 수원·영광·동두천시, 연천군	동결
충북 청주·제천시, 옥천·음성·영동·청양·보은·괴산·진천군	동결
경북 청주·영덕군	동결
경남 김해·밀양·거제시, 고성·산청·함안·남해군	동결
전남 구례군	동결

(자료: 각 지방의회)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의정부 동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정부 동결보다는 삭감 또는 반납 등 좀 더 적극적인 고충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 활동은 통한시간 채 의정비를 쟁거는 구태를 벗어났다 못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 13명은 원구성도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면서도 의정비는 7월과 8월 각각 285만원씩 조박막정했다.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달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벌여 보름간 개점휴업 상태였으나, 구의원 12명은 의정부 295만6600원씩을 모두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34명은 지난 7월 고 3천만 의정활동등을 하고 의정부 308만원을 받아 쟁겼다. 이들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2번만에,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1번만에 각각 정회를 선포했다. 황일송 기자. 대전=정재혁 기자

lsong@kmb.co.kr

정부-지자체 복지사업 '떠넘기기'

복지부 "분권교부세 컸으니 지자체 책임져야"
지자체 "수요 비례 태부족...정부가 가져가라"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복지정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복지는 국가 책임이나 사업을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를 하자고 해서 예산(분권교부세)도 내려보냈는데 돈이 드는 복지사업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지자체 "복지사업 예산 부족"
중앙정부는 2005년 145개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했다. 장애인복지 운영,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복지 관련 사업 비중이 70%에 이른다. 이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內國稅)의 0.94%를 떼어 지방에 나눠주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올해의 경우 분권교부세 금액은 1조2000억원이 가깝다.

분제는 분권교부세로 들어오는 예산은 세수(稅收)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고 있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크게 늘지 않아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며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한 해 1200억원가량을 분권교부세로 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늘어난 복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며 "2005년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국고사업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일부 복지사업에 늘리고 지원해왔다. 2008년에는 경로당 난방비로 508억원, 자선단체 결식아동 지원비로 421억원, 올해는 경로당 난방비로 411억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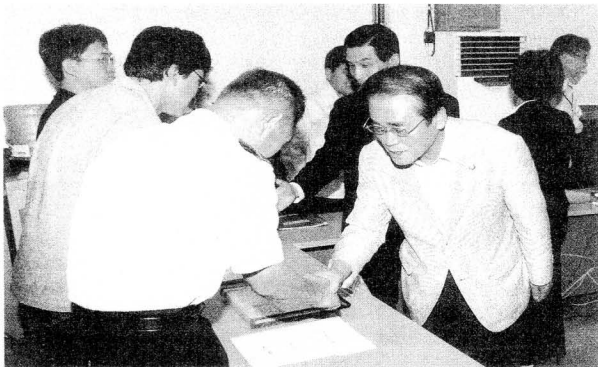
◆정부 "지자체가 해결해야"
복지부 등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건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분권교부세를 늘리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다시 들리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재정부 행정예산과 관계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국고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 재정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정부 간 조율 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은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을 조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과 중재해야 할 국무총리실은 작년 9월 분권교부세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면서 지자체와 정부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해 분권교부세 해당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면이 없는 상태다. 이은은 기자 seon@hankyung.com

2010 을지 훈련 근무자 격려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은 8월 16일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도봉서방서 종합 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도 '2010 을지훈련'에 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후 훈련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

강북구의회 임사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제144회 임사회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사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으로는 ▲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6대 의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약 154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돼 강북구의회 민생 행보의 시작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